

광주시, 행정통합 공청회 의견 정책반영 전략 강구

19·20일 잇따라 긴급 간부회의 특별법 특례조항 연계 등 논의

광주시가 광주전남 통합 시민공청회와 시민소통플랫폼에 올라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논의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연속 시청 중회의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 특례 조항 검토와 대시민 소통·홍보 전략 등을 집중 논의했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광주전남 통합 동구 권역 시민공청회를 시작으로 각계각층 의견 청취에 나섰다. 통합에 따른 행정서비스 변화, 도시 정체성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광주시는 이를 단순 의견 수렴으로 그치지 않고 곧바로 간부회의 안건으로 올려 후속 논의에 착수했다.

연이은 회의에서는 시민들이 제감할 수 있는 방식의 소통이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궁금점 등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기정 시장은 행정서비스 변화, 정부 지원 규모, 통합 추진 일정 등에 시민 관심이 집중된 만큼 대시민 홍보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설명과 소통방식의 창의적 홍보를 주문했다. 형식적인 설명회나 안내를 지양하고, 일자리·교육·생활 변화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또 부서별·직능별 간담회를 확대하고, 공청회에서 나온 질문 등을 정리해 시민에게 다시 설명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통합 바로알기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교육청, 시의회, 자치구, 구의회 등 5개 기관이 함께 자치구별 순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합동 공청회는 22일 서구(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23일 광산구(광산구청 윤상원홀), 27일 북구(북구문화센터), 28일 남구(빛고을시민문화관) 등 자치구별로 각 1회씩 열린다.

또 오는 23일부터는 건설·안전·교통·노



강기정 광주시장이 20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및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동, 경제·산업, 문화·체육·관광, 보건의료, 복지, 교육·청년, 환경 등 직능별·분야별 시민 공청회도 잇따라 개최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으로 광주는 광역시에서 자치분권이 한층 강화된 특별시로 진화하게 된다. 세계적 도시들이

메가시티로 생존을 도모할 때 행정구역이라는 선에 갇혀 주저한다면 미래 세대에겐 죄를 짓는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력과

파력으로 도시 운명을 결정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와 통합 쟁점 조율”

광역의원 정수·특별시 명칭 등 집중 논의

광주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주요 쟁점 사항을 전남도의회와 직접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는 20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응 4차 테스크포스(TF)를 열고, 행정통합과 관련해 전남도의회와 직접 만나는 의견을 조율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마련한 건의안을 광주시에 전달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의원 정수, 통합 특별시 명칭 등 주요 쟁점 등에서 이견을 확인.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광주시의회는 인구 비례를

고려해 현 시의원 지역구 정수를 20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고, 광주·전남 통합 비례의원도 9명에서 20명으로 늘려 전남도의회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남도의회는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특별시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시의회와 도의회가 의원 정수, 명칭, 통합의회 청사 위치 등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직접 만나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가 동의하면 양 의회



광주시의회는 20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응 4차 테스크포스(TF)를 열었다.

는 직접적인 만남을 갖고, 특별법 초안에 담긴 구체적인 의회 구성 방안 등을 협의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의회 간 협력이 충분히 이

뤄지지 못했다”며 “직접 당사자인 시의회와 도의회가 직접 만남 필요가 있다. 이견이 있더라도 우선 만나 서로의 입장을 공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정부, 이 대통령 피습사건 ‘테러’ 지정

〈부산 가덕도〉

테러방지법 제정 후 첫 사례…진상규명·방치책 마련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피습 당한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 추가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것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진 대테러 합동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습격범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으며, 법제처의 법률 검토도 추가로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 사건 피습 사건에 대해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은 “후속 조치로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씨(67)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연합뉴스

“2월 중 국회서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당정, 행정통합 드라이브…국회서 세부 내용 논의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 가운데 당정이 이를 위한 특별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인 신정훈 의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서 이같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연간) 5

조원 인센티브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세실장을 중심으로 테스크포스(TF)가 가동돼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참석자 간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 분권 강화와 행정조직의 권한, 교육감 선출 방식 등에 대한 토론이 오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통합 지자체의 자치단

체장을 장관급으로 하고 현행 부시장 또는 부지사 수를 유지하면서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문제를 놓고는 일부에서 이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인구가 300만~400만명 밖에 안 되는 지역에 차관급 네 명을 둔다는 것은 과잉이라는 의견이 나왔다”며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과 통합이 이뤄지는 지역 의원들 간 미묘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행정 통합 측면에선 통합 교육감 선출과 함께 지자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성오 기자

전남 토지 면적 축구장 168개 가량 늘었다

지난해 말 1만2364㎢…산업단지·SOC 부지 증가

전남도는 2025년 말 기준 토지 면적을 1만2364㎢, 593만 필지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축구장 크기(105m×68m)의 168배에 해당하는 1.2㎢가 늘어난 규모다.

토지 면적 증가는 무안 오통지구 택지개발 6단계 준공과 목포 신항 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 대단위 공유수면 매립 준공의 영향으로 보인다. 전남의 토지 면적은 전 국토의 12.3%를 차지하며, 전국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넓다.

시·군별로는 해남(1045㎢), 순천(911㎢), 고흥(807㎢) 순이며, 지난해보다 가장 많이 늘어난 시·군은 목포시와 무안군으로 각각 0.5㎢ 증가했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가 56%, 농지가 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각종 개발사업과 SOC 확충으로 도로, 철도, 공장용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남이 전통

적인 농·어업 중심지에서 벗어나 AI 기반의 첨단산업 거점과 에너지 수도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엔 확정된 지적 데이터를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을 통해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토지 통계는 국토의 면적과 이용 현황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정부 교부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도민을 위한 토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 ‘총력’

곡성 육용오리농장 선제 살처분·소독 강화

전남도는 20일 곡성 결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전남도 방역당국은 즉각 초동방역 조치를 하고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2만 7000여마리를 사육하는 곳이다. 사육단계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으며, 현재 농립축산 검역본부에서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 검사 중이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은 1~3일이 소요된다.

전남도는 항원 검출 직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 또 추가 확산 방지와 감염 개체 조기 발견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 변경 10km 이내 가금농장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이나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또 현장지원관 2명도 파견해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남도는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장을 선제 살처분하고, 청소·소독과 함께 주변 지역 환경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후 관리도 할 방침이다.

또한 발생 계열사와 전남지역 오리농장,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20일 낮 12시부터 21일 낮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가금농장과 축산관계 시설 일제 소독을 하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한파로 소독시설 동파 등 방역 여건이 악화되는 시기인 만큼 농가 자율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독시설 동파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온이 비교적 높은 낮 시간대(10~14시)를 활용해 농장 안팎을 집중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화 같이신기와 발판 소독조 소독액 수시 교체 등 기본적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농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일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적으로 36건이 발생했으며, 전남에서는 나주와 영암에서 7건이 확인됐다.

이현규 기자 gnnews1@곡성=김유민 기자 hnnews1@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